정부, 적극 행정에 두 팔 걷어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입법지연 대비 하위법령 정비
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 · 일회용품 줄이기 등 논의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해 입법과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도 만든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관계부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측은 "아이돌봄지원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국민 삶의 질과 안전에 밀접한 영역의 핵심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호 안건은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이다.

정부는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사회 정착 지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3호 안건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관리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등 국민의 소비유형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장기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 조명래(앞줄 왼쪽 여섯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2020 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美 50억달러 방위비 요구 불합리… 韓 비난 못해"

美 전문가들도 불합리성 지적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미 전문가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분담금 규모를 점차 올려가는 건 괜찮지만, '50억달러'라는 액수는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미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다른 안보 파트너와 비교해 한국은 차이를 보여왔다"며 "한국은 공정한 부담 분담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이전해 대비 7% 증가한 430억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5년 간 2390억달러를 국방비로 추가 지출할 계획이라는 점 ▲이중 280억달러를 정보감시정찰(ISR) 역량 향상 등 전략무기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또 한국의 F-35 전투기 추가 구매 가능성을 거론, "아무도 한국이 인색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 측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 요구는 결국 중국과의 경쟁이 미 외교정책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스스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그럼에도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비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금전적 효과에 치중해 한국의 미래 국방계획을 모르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담 분담은 현금 그 이상이다. 이는 역량과 능력, 의지에 관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은 제안(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을 밀어붙이기보단 이들 요소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요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 열쇠를 넘겨주기로 결심할 공산"에 빗대기도 했다. 그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한국이 자국 영토 미군 주둔 비용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렇다"면서도 "50억달러가 합리적인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공소시효 지났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 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고인 향한 험담에 유족 가슴 멍든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치유와 희망' 성료
유족 권리선언 캠페인 · 동료지원 활동가 발대식 등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이들은 '불효자다, 나약하게 자랐나 보네'와 같은 고인에 대한 험담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이 되는 말은 '많이 힘들었겠다'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19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치유와 희망'을 개최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미국에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해리 리드 상원의원의 발의로 지정돼 1999년부터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올해로 세번째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살 유족 권리선언 캠페인'과 '동료지원 활동가 발대식'이 마련됐다.

복지부, 경찰청,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자살 유족에게 '위로가 되는 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선포하는 '자살 유족 권리선언 홍보활동(캠페인)'을 진행했다.

2018년 심리부검·면담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건 발생 시 유족의 71.9%가 자살에 대한 편견, 자책감 등으로 고인의 자살을 주변에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9월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유족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1차 93명, 2차 68명)에 걸쳐 '위로가 되는 말, 상처가 되는 말' 설문조사를 진행, 가장 많이 응답한 말을 5개씩 선정했다.

위로가 되는 말은 ▲많이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아니야 ▲힘들면 실컷 울어도 돼 ▲고인도 네가 잘 지내기를 바랄 거야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등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상처가 되는 말로는 ▲불효자다, 나약하게 자랐나 보네 등 고인에 대한 험담 ▲이제 그만 잊어라 ▲너는 고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왜 그랬대? ▲이제 괜찮을 때도 됐잖아 순으로 꼽혔다.

'위로가 되는 말 알리기' 캠페인 등 '자살 유족 권리선언 캠페인'은 12월 한 달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사별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된 유족이 또 다른 유족의 치유를 돕고 당당히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을 위해 유족으로 구성된 '동료지원 활동 준비위원회'가 위촉됐다.

'동료지원 활동 준비위원회'는 동료지원 활동가가 지역사회의 유족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서비스 홍보에 나선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내년도 예산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지난 22일 도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환경녹지국이 올해보다 1012억4756만원(전년대비 32.25%) 증가한 4152억3335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위원회는 간담회를 갖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과감한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첫 예산안 심사 대상인 '환경녹지국'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마다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것을 집행부서에 주문했다"며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사는 '돈 심사'가 아니라 '시책이나 사업' 내역심사가 중요하다"며 "산술기초가 불분명하고 어정쩡하거나 기대효과도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예산의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돼 있는지, 투자와 지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은 충분하지 꼼꼼하게 따질 것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으며, 이병철 의원(전주5)도 "송하진 지사의 공약과 국책사업, 현안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